신빈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

朴 純 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1997년 말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비록 외형적으로 외환보유고,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불안감이 사회 곳곳을 압박하며 빈부격차의 확대, 청년실업, 조기퇴직, 경제형범죄의 증가, 생활고로 인한 가정해체와 출산율 저하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표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안정은 울리히 벡이 말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 즉 예측가능하지 않는 사회적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사회로의 진전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과 ME 혁명으로 대표되는 거시경제적 구조변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복지모형으로 포괄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청년실업과 장년층 및 조기퇴직자의 장기실업 그리고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빈곤 등이다. 이러한 신빈곤의 원인을 일일이 거명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의 케인즈-베버리지언 복지자본주의 모형의 기본가정 붕괴에서 그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주지한 바와 같이 완전고용의 가정은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저성장과 신기술로 인한 노동수요 감소로 붕괴되었으며 그 결과 청년실업과 노동의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베버리지 모형은 남성가장-여성주부(breadwinner-housekeeper)를 전형적으로 가정하였지만 '가족'개념의 해체로 맞벌이, 한부모 가구, 독신가구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가정 또한 무너졌다. 그 결과 여성과 노인의 빈곤이 증가하였으며 가구간 소득격차도 크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국가 경계 내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존 복지모형의 가정 또한 지구화(globalization)로 대변되는 국민국가의 약화로 그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신빈곤 현상 또한 전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즉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보편적인 신빈곤 현상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대응방식과 그 성과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사회지출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즉 '구(舊)빈곤에 대한 대처조차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신빈곤의 위협-대표적으로 청년실업과 여성빈곤-과 구빈곤의 잔재-대표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빈곤-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더구나 가족으로 대변되는 비교적 강한 사적 부양체계 또한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빈곤과 빈곤의 '위협'은 사회통합을 크게 저해하고 사회적 위기감과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잠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이 즈음이 참여복지를 기치로 내걸고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새정부가 복지에 대해 얼마나 새롭고 구체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특히 기존의 빈곤과 새로운 빈곤에 동시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는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것이다. 신빈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이번 보건복지포럼이 정부와 관계 그리고 학계 모두가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복지모형과 미시적인 대안들을 어떻게 구조화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좀 더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골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새로운정부출범1주년을맞는이즈음이
참여복지를기치로내걸고
사회통합을강조하는새정부가복지에대해
얼마나새롭고구체적인비전과대안을
제시하고있는지돌이켜보고
앞으로의과제를좀더구체화시켜야할시점이다.